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한국의 미래 모습은 어떤가? 지금으로부터 40년 후를 서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달러에 도달하여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낙관적 전망이 있는가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8700달러로 줄어들어 1994년 경제수준이 될 것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비관적 전망도 있다. 세계 경제 안에서 잘되면 중심부로 올라설 수 있지만, 잘못되면 주변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다.

사자 반세기를 넘은 경우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은 상식이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분단이 지속됨에 따라 치러온 비용을 '분단비용'이라 한다.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

을 가정하여 그 이후 남북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쓰여질 비용을 '통일비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남북대치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모두 분단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통일비용은 남북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결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소요를 포함할 수 있다.

분단비용으로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인명 손실, 이산가족의 정신적 고통, 국제사회에서 신인도 제약, 해외로의 인구 이주, 과도한 군사비 지출, 사회복지예산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통일비용은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기간 안에 남한 주민이 그것과 같게 되기 위하여 남한이 투자하고 지출해야 하는 재정소요액

을 가리킨다. 독일의 통일은 동서독 사이 오랫동안 걸친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덕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냉전체제의 해체와중에서 구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사이의 이해관계 변화가 외부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독과 동독 사이의 부단한 대화와 접촉이 없었다면, 독일인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가다듬지 못했을 수도 있다.

분단국가보다는 통일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자

할 수 있을 지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여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화급한 과제다. 최선의 방법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자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편으로 긴장완화를 통해 분단비용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체제전환을 통해 통일비용도 줄이는 데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북한의 개방과 개혁 실험은 주체사상이란 폐쇄화로에 갇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3대 세습이란 반(反)사회주의적 일탈 아래 후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가 있다. 오랜 분단의 고통으로 인한 통일에 대한 갈망이다. 문제는 독일의 통일이 보여주고 있듯이, 비록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돈'의 힘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통일세의 도입에 앞서 남북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물적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에 다름 아니다.

(서울대 정치사회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세에 가린 분단비용

각은 서독과 동독 사이의 소득격차가 더 늘어나기 전에 결합을 함으로써 분단비용의 누적으로부터 벗어나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추계가 있으며, 분단비용은 이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30년 잡고 통일비용이 적게는 3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2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있다. 남한의 1년 예산이 2500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독일이 통일 이후 20년간 2조5000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과연 한국이 단독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내

시설

또 초등학교서 성폭행 언제까지 이런 일이

대낮에 광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지체 장애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발생한 '김수철 사건' 이후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 냈지만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이다. 여전히 학교가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학부모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 학생이 학교 정문에서 분관 현관까지 범인에게 끌려갔는데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일요일이라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챙길 경비실이나 당직 교사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곳은 당직실이 있는 학교 뒤편 현관으로, 당시 당직실에는 경비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니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학교 분관 주변에는 모두 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현관 부근이 찍히지 않아 감시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정작 어린이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비원이나 장치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이다.

어린이 성폭행은 엄한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학교 경비 인력 및 CCTV 등 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휴일이나 밤과 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학교 문만 활짝 열어놓은 것도 문제다.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휴일에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만큼 지역과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순찰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 성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행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 지체 장애 학생에게는 한층 강화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 학생은 부모 없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다 성폭행 뒤 수일간 방치돼 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절실하다.

지방 현실 외면한 8·29 부동산 정책

정부가 29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4·23 대책'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없애고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 각각 2년·1년 연장, 저소득 세입자의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부동산 금융규제 가운데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풀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8·29 대책은 수도권에는 다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이미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을 상실한 지방에서는 특별히 수요 유발의 유인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지방으로 유입되던 자금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우려도 있다. 이번 대책이 지방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 활성화, 건설업체 소유 부동산 유통화 지원, 지방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완화로 도산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유통성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 활성화, 건설업체 소유 부동산 유통화 지원, 지방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완화로 도산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유통성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정재원



지난달 광주시는 '광주광역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 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제정이유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시민의 의사 표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를 통해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시책 추진과정 등의 공개로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시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의무적 정보공개 확대이다. 정청구하기 위해서는 3300명의 연서(선거권자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참여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대전시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타·시도에 비해 10배가 넘는 청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시민참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생각

보공개는 시민참여의 기본 전제다. 이번 조례안 제6조는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면서도 단서조항에 의해 특정사항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안이다. 형식적인 정보공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회의록 및 회의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과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각종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의 위원회 운영은 형식적인 운영으로 집행부의 틀러리 역할에 시민참여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준과 위원회운영의 정례회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토론 등 청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정책토론 청구는 광주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토론회를 요청하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제도이다. 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광주시에 토론·공청회를

위원을 구성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운영 효율화, 기타 예산운영에 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상 70인 이하의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구성에서 도·의회, 자치구,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자 등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예산편성과정에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광주시의 조례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참여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려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위상도 자본기구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이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광주시의 시민참여조례 제정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집행부의 전이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지만 이는 과거시대의 유훈이다.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거의 일방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폐해를 줄여나갈 것으로 믿는다.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회장)

기고

정선수



극성스러웠던 더위가 한풀 꺾였다. 가을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해 이맘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경고하면서 각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었는데 올해는 지난 8월 10일을 기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단계를 대유행후단계(post-pandemic period)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마치 신종인플루엔자가 끝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법하다. 그러나 대유행후단계(post-pandemic period)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수준이 통상적인 계절인플루엔자 발생수준으로 하강하고 있

주간감시에서 일일감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도 지난해 발생했던 바이러스(A형 H1N1)가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외에도 1~2가지(A형 H3N2, B형)가 더 유행할 것으로 보고 만 19세~49세 일반인은 1가 백신(A형 H1N1)을, 계절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는 3가 백신(A형 H1N1, A형 H3N2, B형)을 접종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계절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와 그 보호자 그리고 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가을 준비

다는 것을 의미할 뿐 유행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단계가 대유행후단계로 조정된 것은 세계 인구의 20~40%가 감염되어 일정 정도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집단면역 수준이 높아져서다.

그러나 인도, 태국,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도 점차 늘고 있어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호흡기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접종(특히 고위험군)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9월 말부터는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후 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이다. 우리시는 9월부터 만 19세~49세 일반인 중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가 백신(A형 H1N1)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며, 각 보건소에 3가백신(A형 H1N1, A형 H3N2, B형) 공급이 완료되는 10월초부터는 계절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해의 대유행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질병관리본부의 권장기준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것이다. 특히 계절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많은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예방접종 권장기준을 준수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일이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대학교 화학실험실내 안전수칙 지켜져야

대학교 화학과에 다니는 아들이 옷을 사입히기만 하면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 왔다. 한번은 무슨 옷을 그렇게 입고다니느냐고 핀잔을 줬더니 아기가 피식 웃으며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상황 설명을 듣고서야 그동안 아기가 부주의로 옷에 구멍을 낸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가 화학약품이 튀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매스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뉴스가 대학교 실험실의 안전사고다. 그런데 대학 실험실은 안전에 미흡한 것 같다.

아이 말을 들어보니 옷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험실용 특수 앞치마 같은 것은

마땅히 준비하지 않은 채 실험을 한다는 것이다. '위험' 딱지가 붙은 시약 병을 연구실 밖 복도에 놔두기 일쑤라고 한다. 안전한 보관시설에 넣어야 하지만 화학약품은 마땅히 넣을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폐기시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잖다고 했다.

몇 년 전엔 대학 실험실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명이 다진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또 터지지 않도록 대학 화학실험실 안에서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無等鼓 (후학) 리종우의 후학은 오늘날의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말과 상통한다. 자신 스스로 잘못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두꺼운 낮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겨야 권좌에 오르고 부귀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리종우는 정치관에서 권력을 얻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다. 리종우가 제창한 후학은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가 세력을 이겨내고 현대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이 탐독하면서 유명해졌다. 리종우는 인의(仁義)와 정의(正義)를 내세우는 정치가들의 내면을 '두꺼운 낮(厚)과 시커먼 마음(黑)'이 지닌 잡았기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조조와 유비 등 삼국지의 영웅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자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649> 여론매체부 2200-621 <대표 FAX 222-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